



한국 방위산업, 이대로 괜찮을까?

강혁민(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아시아학과 조교수)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수주 '잭팟'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서도 방위산업은 이른바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방산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AI 기반 첨단전력 확보,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꽤 분명해 보인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군수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군사·방산 역량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2026년 파워인덱스(Pwr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0.1642)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가 더 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순위다. 물론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세계 무기 공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주체로 올라섰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 보고서¹⁾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방산기업은 약 468개에 달하고 이들 기업의 총매출은 2024년 약 31조 원 규모였으며, 2025년에는 약 40조 원, 2026년에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²⁾ 역시 한국이 유럽·중동·아시아·미주 등 17개 지역에서 28개 사업을 통해 무기를 수출했으며,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분석한다. K-방산은 더 이상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방위산업이 그렇듯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 국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시장의 자율 경쟁만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명확한 수요가 존재할 때 비로소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진다. 전쟁이나 내전,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무기가 필요한 국가가 정부 차원의 계약을 요청하면, 국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생산과 수출이 진행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외교·안보·재정·기술 개발 전반에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특히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집약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방공체계와 같은 무기체계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간의 기술 축적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 특허와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크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장기적 R&D 시스템, 군과의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다. 결국 방위산업은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국가의 전략적 의지와 장기간의 정책적 투자, 그리고 국제정치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성장 가능한 산업이다.

1) 방위사업청. 2026.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표.

2) 산업연구원. 2026.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수출의 경제적, 산업적 의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 방위산업의 급성장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기업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국제정세가 만들어낸 구조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결과라고 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0년 이후 이어진 세 차례의 대규모 전쟁은 한국을 세계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부상시켰다. 특히 한국 특유의 빠른 생산능력과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그리고 비교적 높은 가격 경쟁력은 전쟁 이후 무기 수요가 폭증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폴란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폴란드는 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약 124억 달러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이 유럽 안보질서의 새로운 공급축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더 나아가 NATO 중심의 기존 안보체계가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 국가들은 빠른 납기와 실전 운용 능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럽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국가들 역시 방공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II(M-SAM2)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결국 오늘날 K-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산업 성장의 결과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불안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수요에 힘입은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방위산업이 전쟁으로만 산업적 수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방산시장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내전, 정치폭력, 시위 진압과 같이 국가가 자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치안용 무기’ 시장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치안무기의 수요국은 전쟁무기 수요국보다 훨씬 더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루탄 수출이다. 반전운동 단체 「전쟁없는 세상」이 발표한 2025년 보고서³⁾에 따르면, 한국산 최루탄은 지난 10년 동안 35개국에 약 1122만 발 수출되었다. 그 가운데 31개국, 즉 전체의 약 89%가 오만,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권위주의 성향의 국가들이었다. 이는 한국산 치안장비가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 정치적

반대세력과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산 치안용 장갑차인 ‘바라쿠다’가 2025년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약 2700여 대 규모의 물대포 장비를 수출해왔다. 결국 한국산 치안 무기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해외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방산 수출의 경제적 성과만 부각될 뿐, 무기의 최종 사용처와 그 정치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제19조는 분명히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다자간 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지정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즉, 무기나 치안장비가 인권침해나 국제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3) 전쟁없는 세상. 2025.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및 남용실태』. 9페이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산 최루탄, 물대포, 치안용 장갑차와 같은 장비들이 권위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통제를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한국산 무기와 장비가 해외에서 시민 탄압과 정치적 폭력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국가가 사실상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방향과 목적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와 같은 방위산업 확대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중견국 외교의 국제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이후 출근 동북아 균형자론, 글로벌 코리아, 책임 있는 중견국, 글로벌 중추국가와 같은 비전을 내세우며 역내 안보질서 안정과 국제규범에 기반한 평화외교를 강조해왔다. 동시에 K-pop,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통해 민주주의와 개방성, 시민적 역동성을 갖춘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특히 촛불혁명을 통해 세워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신남방·신북방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 다자주의, 평화적 공존을 한국 외교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기도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보다는 균형외교와 규범외교를 통해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K-방산 중심의 외교는 이러한 중견국 정체성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자주국방과 방산 육성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성장 방식과 수출 방향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치안장비를 판매하고, 국제분쟁과 전쟁의 확대 속에서 국가산업의 기회를 찾는 구조가 과연 한국이 스스로 강조해온 평화·민주주의·다자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가? 평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전쟁의 수요 속에서 성장하는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삼는 현실은 결국 대한민국 외교의 도덕적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현재의 방산 확대 전략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담론의 한계와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중심축으로 삼으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해왔고, 민주주의·인권·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특히 비판적 평화학자들은 자유주의 평화(liberal peace) 담론이 실제로는 ‘승자의 평화’, ‘가상의 평화’, 혹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적 식민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들의 핵심 비판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내부적으로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비우호적이거나 비자유주의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군사개입과 무기 공급, 안보동맹을 통해 갈등과 군사화를 오히려 확대해왔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보편적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들의 안보와 이익을 중심으로 작동해온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비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군사개입을 지속해왔고,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을 육성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인지, 아니면 군사적 패권질서의 또 다른 이름인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국의 K-방산 확대 역시 예외가 아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규범외교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국제분쟁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모습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닌 이중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 역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지역 평화국가 이미지를 강조해왔지만, 동시에 AUKUS, ANZUS, Five Eyes와 같은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방위산업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비슷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화를 통해 성장하는 국가”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오래된 모순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돌파구는 무엇일까?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위산업에 대한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나 수출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 전쟁, 폭력, 그리고 민주주의와 직접 연결되는 고도의 윤리적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방산기업들은 아직까지 무기수출과 치안장비 수출에 대한 명확한 윤리원칙과 사회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비교적 엄격한 무기수출 통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내전과 분쟁이 지속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수출 이후 실제 사용 목적까지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발전시켜 왔다. 물론 한국 역시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규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실익과 수출 확대 논리가 우선되면서 이러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방산 윤리강령과 인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무기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가 아니라, “그 무기가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사용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분쟁과 내전, 민주주의 탄압에 기여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을 방지한 채 K-방산의 성공만을 강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외교적 정당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방위산업은 유례없는 성장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실제 전쟁과 정치적 폭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하지 않았다. 실용외교라는 이름 아래 경제효과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결국 윤리적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평화국가·민주국가라는 정체성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위산업의 무조건적인 확대도, 감정적인 반대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가치 위에서 방위산업을 어떻게 통제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이제라도 한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명확한 윤리 기준과 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평화주의적 국가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필자 소개

강혁민(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아시아학과 조교수)



강혁민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아시아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KHU-HSE 복수학위 및 EDCF 석사학위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다. 평화학을 전공했으며 분쟁후사회 이행기 정의와 정치적 화해를 주로 연구한다. 최근에는 아고니즘적 남북관계와 방위산업에 대한 윤리적 성찰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Voices of the Marginalized: Victims' Perspectives on Agonistic Reconciliation and Power Disparity」, 「Enforced Silence or Mindful Nonviolent Action?」 등이 있다, 이 외에도 8권의 평화관련 저술에 참여했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031-5176-2332 | FAX: 031-624-4751 | Email: tongil@snu.ac.kr